

# OECD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개선과제<sup>1) 2)</sup>



Willem Adema OECD 아시아 사회보장 아웃리치 담당 과장  
Maxime Ladaïque OECD 사회 정책부 통계 담당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본고는 OECD의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회원국들의 사회복지지출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회원국들간의 상이한 경제 수준에 따른 지출 규모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편, 공통적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여 2003년에는 평균적으로 GDP의 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평균 GDP의 7%를 차지하며, 보건 지출과 사회 서비스는 각각 평균 6%와 2%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지출에 큰 증가가 있었으며 2003년 현재 GDP의 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과 조세제도의 효과는 국가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OECD 24개 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OECD의 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을 포함한 20여개국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자 정보를 포함시켜 국가간 사회정책 발전의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 1. 개 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사회 정책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하 'SOEX')를 개발하

였다.<sup>3)</sup> 기존 연구로는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계정 체계를 제공하는 국민계정 체계<sup>4)</sup>가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계정체계에 기록된 '사회 이전'(현금과 현물)에 포함된 자료의 집합적 성격 때문에 공공 사회 정책 프로그램과 동향 분석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sup>5)</sup>

1) 번역 : 이수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2) 본고에 표현된 의견과 주장은 저자의 책임이며, OECD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3) OECD (1996),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provisional version',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7,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4) SNA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OEC-EUROSTAT, IMF, OECD, UN and the World Bank, Brussel/Luxembourg/New York/Paris/Washington, DC.

5) UN사무국은 국민계정에 기록된 가능별 정부지출분류와 같이, 공공지출 사업 프로그램의 맥락에 따라, 포괄적인 기준 위에서 하위 지출 집합에 소속될 세부 항목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Varley, R (1986), "The government

따라서 SOCX는 지출 항목을 세부 지출 수준인 사회복지지출 프로그램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면, SOCX에는 캐나다의 경우 60개,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62개, 한국의 경우 100개에 가까운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지출 세항의 기록을 통해서 개개 급여 개혁의 분석이 가능해지며,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지출을 분류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자료 기록시의 비일관성이 감소된다.

SOCX의 개선 작업은 현재 관심의 대상이다. 2004년에 인터넷(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을 통해 SOCX 최근판이 발표된 이후 OECD는 SOCX를 개선하기 위해 다차원으로 노력해왔다. 자료의 범위 측면에서, SOCX의 신판은 더욱 포괄적인 육아와 취학전 서비스 관련 지출 자료를 포함하며, 보건계정체계의 실행을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와 함께<sup>6)</sup>, 장기요양 관련 지출 자료의 질이 향상되었다. 더 나아가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신판은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과<sup>7)</sup> (세후) 순사회복지지출을 포함하게 될 것인데, 이는 1990년

대부터 개발되어온 것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75%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신판은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sup>8)</sup>와 함께 12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 2.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결과 요약

### 1) 지출 추세

27개 OECD 국가의 평균 공공 사회복지지출 [그림 1]은 1980년의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16%에서 2003년의 21%로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간 평균 GDP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그리고 또 다시 2000년대 초반에는 상당한 증가를 보인 반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1%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30년동안 앞서 말한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사이에는 GDP 대비 지

출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1980년대의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에 약간 못미쳤으며, 1990년대에는 20%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유지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유형은 OECD 평균과는 다르게 재정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은 변동 을 보였다.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분석해보면 사회복지지출은 경기순환의 경향과 반대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림 1]. 급격한 경기 침체와 이와 관련된 고용 개편은 즉각적인 사회 보장 급여, 실업 보상 급여, 조기 퇴직 급여의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경기 호전은 실업 인구와 사회 보장 급여 수령자 수를 감소시키며,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비고용소득보조 급여의 지출을 감소시킨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업 경기 주기에 가장 민감한 지출은 실업 보상 급여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지출은 OECD 국가 전역에서 1993년에 GDP 대비 평

### Box 1 OECD의 사회복지지출에는 어떠한 지출들이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와 재정적 지원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직접 지급이나 개별 계약 또는 이전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은 현금 급여(예: 연금), 현물 급여(예: 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혜택 (예: 가족과 아동 대상 세금 지출, 또는 민간 의료 보험에 대한 세금 우대)를 포함한다. 1980년부터 2003년 사이의 시기에, SOCX의 신판은 공공과 민간 급여를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급여로서, 관련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공적으로 운영되고, 법적으로 명문화되거나 또는 개인간 자원의 재분배에 관련 되는 급여를 의미한다.<sup>9)</sup>

국민계정체계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은 일반 정부(예: 중앙 행정부, 지방 정부, 사회 보장 기관)가 관련된 재정의 흐름을 통제할 때 공공 지출로 분류된다. SOCX는 이러한 지출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9개의 사회 정책 분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노령 - 연금, 조기 퇴직 연금,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또는 시설입소 서비스; 유족 - 연금과 장제비; 무능력 관련 - 요양 서비스, 장애 급여, 산업 재해 급여, 병가 급여; 보건 - 외래 및 입원 진료 지출, 의료물품, 예방; 가족 - 아동 수당 및 크레딧, 육아 지원, 육아 휴직 중 소득 보조, 편부모 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 서비스, 노동 시장 훈련, 청년 취업 대책, 고용 지원, 장애인 취업 대책; 실업 - 실업 보상, 퇴직금, 노동 시장 사유로 인한 조기 퇴직 급여; 주거 - 주거 급여와 집세 보조; 기타 사회 정책 분야 - 분류되지 않은 저소득 가구 지원 현금 급여와 기타 사회 서비스로 구성된다.

9) Adema, W. and M. Ladaique (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OECD (200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3, OECD, Paris, forthc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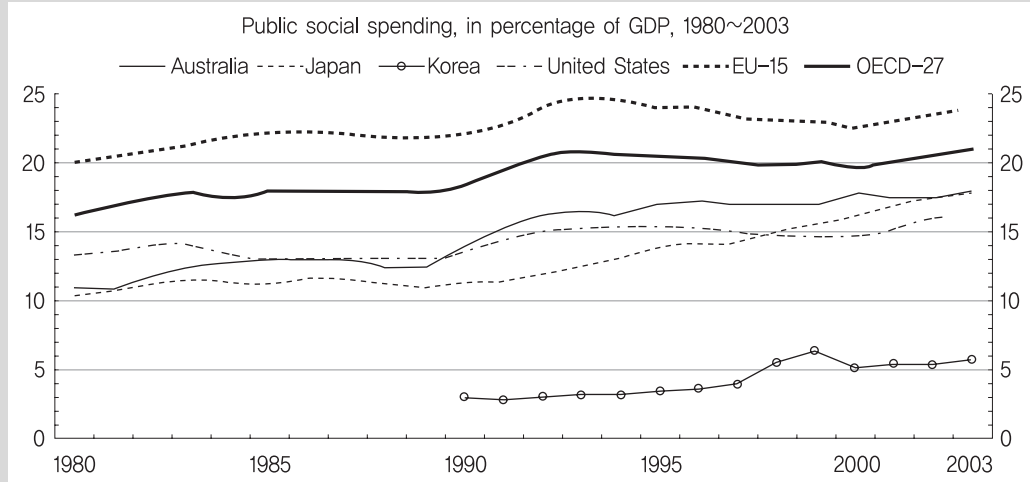
household transfer data base 1960~1984”,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6, OECD, Paris (www.oecd.org/eco/working\_papers); Oxley, H., M. Maher, J.P. Martin, G. Nicoletti and P. Alonso-Gamo (1990), “The public sector: issues for the 1990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0, OECD, Paris (www.oecd.org/eco/working\_papers).

6) Orosz, E. and D. Morgan (2004), “SHA-Base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Thirtee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6, OECD, Paris (www.oecd.org/els/health/workingpapers).

7) Adema, W., B. Ekland, J. Lotz, M. Einerhand and M. Pearson (1996),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9,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Adema, W. and M. Einerhand (1998), “The Growing Role of Private Social Benefit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8) OECD (2006), Society at a Glance, OECD, Paris.

그림 1. OECD 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0년 이후 증가함



Note: Information for 1980 to 2003 is available for 22 countries, while information for the Czech Republic, Iceland, Korea, Mexico, and Poland is available for 1990 onwards. OECD-27 refers to an unweighted average of OECD countries, not including Hungary (data from 1999 onwards), the Slovak Republic (data from 1995 onwards) and Turkey (no data since 2000). EU-15 refers to the 15 countries which constituted the European Union prior to its enlargement in 2004.  
Source: OECD (2006, forthcoming),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군 1.9%로 최고치에 달했으나, 2003년에는 1.2%로 1981/2년 수치 정도였다.

경제 성장의 양상은 국가간 지출의 비교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국제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총 지출을 GDP 대비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측량 시점마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경기가 호전된다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증가세가 감소되거나 퇴조할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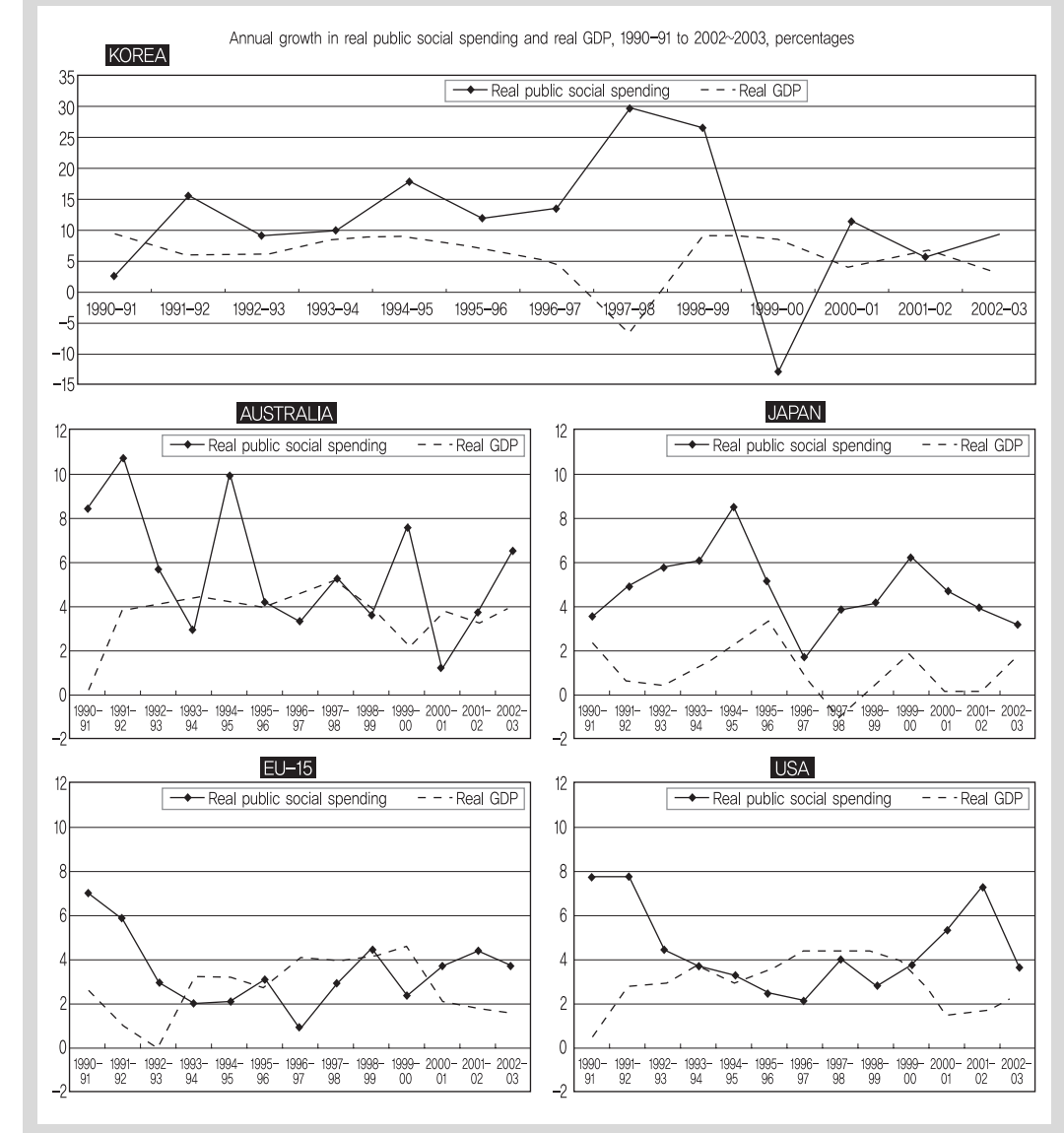
[그림 2]는 OECD 회원국간의 상이한 경제 상황과 상이한 경제권역에 걸친 사회복지지출과 GDP 패턴을 분석한 것이다. 이 도표는 EU

15개국과 미국에서, 2000년 이후 성장률 대비 지출의 증가는 실질 지출의 증가(인플레이션 조정)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GDP는 1990년대 대부분의 시기에 연간 3, 4%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로는 겨우 2% 증가했을 뿐이다[그림 2]. 1999년을 제외하고, 호주의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4%씩 증가했다. 실질 지출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여, GDP 대비 지출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이후 실질 지출의 성장이 실질 GDP의 부진한 성장을 추월하여,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1990년의 10%에서 2003년의 1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한국의 실질 사회복지지출에는 큰 변동이 있었다[그림 2, 단위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에 유의]. 1997/8년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과 별정 우

체국 연금 가입자중 많은 사람들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실질 사회복지지출은 1999년까지 증가하다 2000년에 감소하였다. 민간기업의 법정 퇴직금 지출은 1998년에 최고치

그림 2. 1990년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변동이 컸음



에 달하였다. 실질 GDP가 199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1999년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의 하락에 기여하였다[그림1].

지난 25년간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늘어난) 퇴직인구에 대한 부양 증가와 보건 지출이었다. 1980년 이후로 정보 입수 가능한 22개국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공공 지출은 1980년의 GDP의 5.4%에서 2003년의 7%로 증가했다. 유사하게, 공공보건지출은 1980년의 GDP의 4.9%에서 2003년의 6.2%로 증가하였다. 이 외의 다른 분야 중에서 구조적 지출 증가가 나타나는 곳은 가족 수당이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EU 15개 국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걸쳐, 가족 수당에 대한 지출은 1990년 이래로 GDP의 0.5% 만큼 증가하였다(1980년대에는 중요한 변화가 없었다). SOCX에 기록된 한국의 가족 지출에는 출산 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육아비용, 취학전 교육, 가족과 아동 복지 지출, 고아원과 지역사회 복지관 지출이 포함된다.

## 2) 사회복지지출 2003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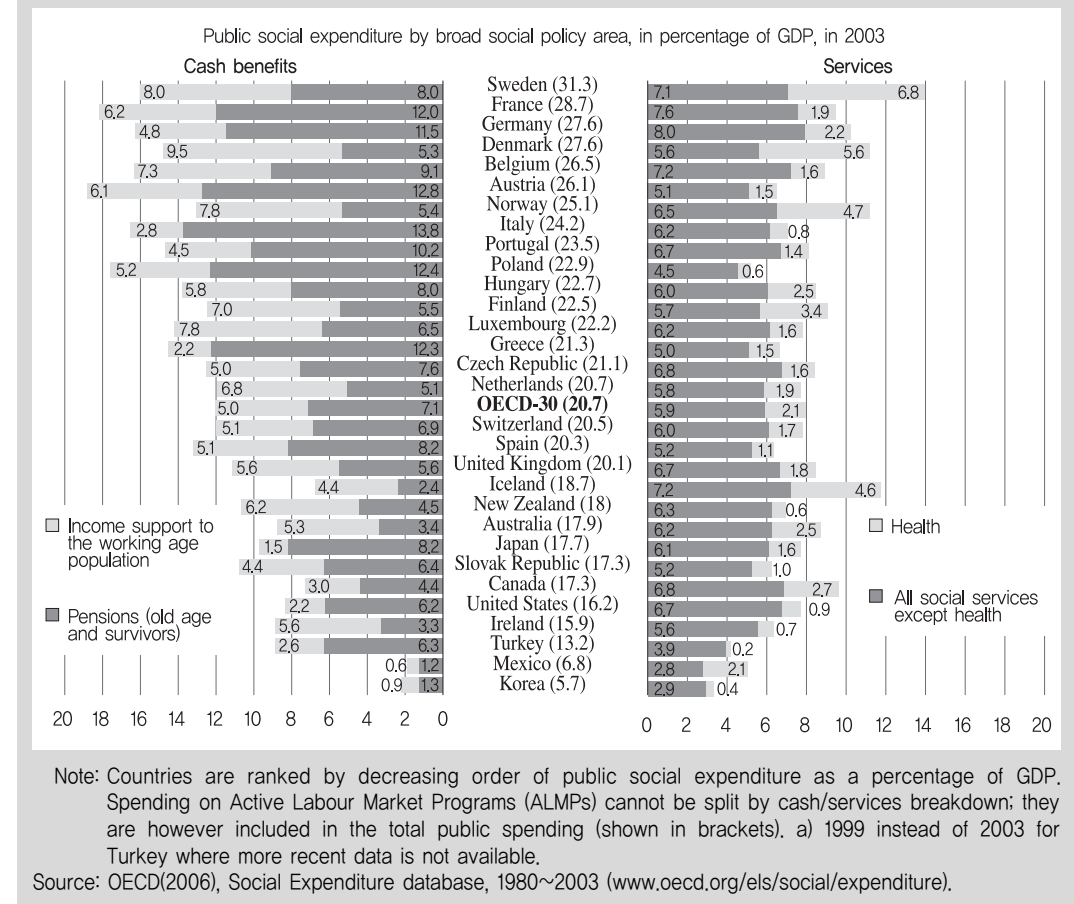
2003년도에 총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GDP의 평균 20.7%를 차지하며, 이중 현금 급여 지출은 서비스 지출보다 두 배나 더 크다[그림 3]. 국가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폭넓은 차이를 보여, 멕시코와 한국의 GDP의 6% 선에서, 31%를 상회하는 스웨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규모면으로 볼 때 공공

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OECD 평균 GDP의 7%를 차지한다(전직 공무원에게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은 제외). 그러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의 경우 GDP의 12% 이상인데 반하여,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는 4% 이하를 차지한다. 도표 3에 기록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중 연금의 비중은 매우 낮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SOCX에서는 법정 민간 부문 지출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연금지출은 2003년 GDP의 약 3.5%에 달할 것이다.

OECD 평균, 노동 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 이전은 GDP의 5%에 달하며, 이중 유자녀 가족과 실업 급여 수령자에 대한 공공지출은 각각 GDP의 약 1.3%에 달한다.

2003년도에 보건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은 OECD평균 GDP의 6%에 달한 반면, 기타 사회 서비스 지출은 평균 GDP의 2%에 미쳤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국가가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만 5%를 상회한 반면, 사적 비공식적 부양에 크게 의존하는 남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GDP의 1% 선에서 변동하였다. 공공 지원 육아 조기 교육 서비스에 대한 SOCX의 향상된 정보는 이 부분에 대한 평균공공지출이 단지 GDP의 1%

그림 3.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7%를 연금에, 6%를 보건의 지출



미관임을 보여준대자료는 네덜란드와 영국과 같이 의무교육이 6세 이전에 시작되는 국가의 초등학교 아동교육에 대한 지출 추세를 포함한다. 국가간 육아와 조기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편차는 상당하여 한국의 GDP의 약 0.2%에서부터, GDP의 2%를 상회하는 덴마크까지 다양하다.

## 3) “총공공사회지출”에서 “순사회지출”로

개별 OECD 국가가 사회보장에 지출하는 자원의 총 금액에 대한 종합적 설명은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지출 모두와, 또한 조세 제도가 사회보장의 유효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도 설명해야 한다. SOCX 신판은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연구 논문 시리즈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sup>10</sup>에 기출된 순사회

복지지출 지표 또한 포함하고 있다.

조세 제도가 “총”(세전)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급여 소득에 대한 정부의 직접 과세와, 급여 수령자가 소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간접 과세를 통한 사회복지지출의 세금환수를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예: 아동 세금 수당).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공공과 민간 재원 모두를 포함한 “순”(세후) 사회복지지출 분석을 통해, 사회적 목표 추구에 사용된 자원의 총합

에 대해 가장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2003년 선별된 OECD 국가 중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부담액과 조세경감액이 정부의 총공공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것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 ① 급여 소득에 대한 직접 과세를 통한 정부의 총사회복지지출의 환수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가장 높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요소 GDP<sup>1)</sup>의 5%가 소득세, 지급급여세로 바로 국고로 환수된다.

- ② 간접세를 통한 총공공지출의 세금 환수 금액은 일반적으로 OECD의 유럽 회원국보다 비유럽 회원국에서 높게 나타난다.
- ③ 급여에 대한 직접세 징수가 제한되어 있는 국가- 캐나다, 독일, 미국 -에서는 비연금 지출에 대한 세금 우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금 우대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공공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환수한다. 그 결과로, 표 1에서 나타난대로 OECD 24개 회원국에서의 2003년도 순공공사회복지지출은 총공공사회복지지출보다 3% 낮게 나타났다. 유일한 예외는 멕시코와 미국(순공공사회복지지출이 총공공 사회복지지출을 상회하는 국가)와 한국과 일본(양 지출이 대략 동일한 경우)이다.

법정 민간연금과 자발적 민간 연금은 다수의 OECD 국가의 민간 사회 급여<sup>12)</su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 GDP 대비 민간 연금 지출 비율은 3%를 상회한다.<sup>13)</sup>

이는 왜냐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연금이 민간 분야(이전)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며(예: 네덜란드, 영국, 미국), SOCX와 SNA93에서도 자율적 기금을 통해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민간 지출 항목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호주(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sup>14)</sup>.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적 의료 보험 제도가 부재한 미국에서, 민간 사회 보건 지출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2003년에 GDP의 거의 6%를 차지하였다(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 지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세전 민간 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의 11%에 육박한다.

한 국가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순 공공 사회 급여와 순민간사회급여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 급여와, 관련 평균 세율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일국 경제의 국내 생산중 사회 급여 수령자가 청구하는 몫인 순사회복지지출(그림 4)을 밝혀내는 것이 수월해진다.

평균적으로, 2003년 OECD 24개국에서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의 2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GDP의 30%를 상회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으로부터, 10%를 밑도는 한국과 멕시코

표 1. 총공공사회지출에서 순공공사회지출로, 2003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orea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24
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	20.3	29.3	30.0	19.6	23.1	32.2	25.7	33.1	30.8	21.7	17.8	27.7	19.1	6.5	7.6	23.2	20.6	28.2	25.8	19.0	22.6	37.1	23.1	17.4	23.4
Direct taxes and social contributions on benefit income	0.2	2.9	1.8	0.4	0.0	4.8	2.5	1.5	1.3	0.8	0.3	2.0	0.3	0.0	-	1.8	1.6	2.4	0.7	-	1.3	5.0	0.2	0.7	1.5
Indirect taxes on goods and services consumed by benefit recipients	1.0	3.2	2.7	1.0	2.3	3.9	3.0	3.3	2.5	1.7	2.4	2.4	0.7	0.4	0.2	2.2	2.0	3.2	3.2	2.0	2.1	3.4	2.0	0.4	2.1
Tax Breaks towards + non-pension Social Policy spending (TBSPs)	0.2	0.0	0.5	1.3	0.5	0.0	-	1.0	2.1	-	0.4	0.3	0.8	0.6	1.0	0.8	0.1	0.1	1.0	0.6	0.4	-	0.5	2.3	0.7
=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19.3	23.2	26.0	19.5	21.3	23.5	20.2	29.2	29.2	19.2	15.5	23.6	19.0	6.8	8.4	20.1	17.1	22.7	22.9	17.6	19.6	28.6	21.4	18.6	20.5
Memorandum item																									
Tax Breaks towards pensions	2.0	0.1	0.2	1.9	0.1	..	0.2	0.0	0.9	1.2	2.2	0.0	0.7	..	0.1	..	..	0.8	0.1	0.0	0.3	0.0	1.1	1.3	..

.. Data not available. - Zero.  
Source: OECD(2006),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3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10) Gho, K, Y, Chang and N, Lee (2003),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11) 급여 소득에서 지불된 간접세의 가치만큼 지출 총액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분모(GDP)에 간접세와 공공/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만큼의 가치를 제외한 요소 비용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12) 노동 연령 인구에 대한 민간 사회 급여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일부 주)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고용주 지불 무능력 관련 현금 급여- 질병, 장애, 산재 급여-를 포함한다. 민간 사회 급여에 대한 다른 예로는 육아 휴직시 고용주 부담액과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간 자료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13) OECD (2006),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3, OECD, Paris, forthcoming.

14) 국민계정체계 (1993) 8.63항 “..... 대체로 노동인구에 반하여, 정부 조직이 자신들의 고용인들을 위해 조직한 사회 보험 제도는 사회적 기금 지원 제도 또는 적절한 경우 기금비 지원제도로 분류되며, 사회 보장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연금은 민간으로 분류되며, 이 지불금들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적자를 보충하지 않는 자율적 민간 기금(예: 독립된 연금 또는 보험 회사)을 통해 지불되어야 한다(예: 실제상의 확정기여형 급여 제도). 비 자율적 연금 제도(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불되는 연금 급여 포함)는 제도적으로 정부 분야로 분류된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간 사회 급여와 조세제도의 영향 모두 국가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차이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실제로 한국가경제의 국내생산중 사회 급여 수령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뉘인 순사회복지지출은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각 국가가 조세와 급여 제도를 통해 달성한 재분배의 정도 또한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재분배는 사회복지지출의 크기만이 아닌, 지출이 얼마나 조준되었으며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 3. SOCX의 향후

SOCX 개발의 다음 단계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자(예: 노령 현금 이전 급여, 장애

급여, 출산과 육아 휴직 급여, 실업 급여, 생활 보장 급여) 수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급여수혜자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는 최초로 네덜란드 사회 고용청과 네덜란드 경제 연구원의 후원으로 개발되었으며,<sup>15)</sup> OECD의 Employment Outlook<sup>6)</sup>에 의해 확대 연구되었다. 더 많은 국가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과제가 이미 진행중에 있으며, 이 정보는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연구 논문 시리즈를

통해 내년 초에 최초로 배포될 예정이다. 2008/9년 배포 예정인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한국을 포함한 최소 OECD 20개국의 급여수혜자 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OECD는 장기적으로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향상과, 개별 사회 정책 발전의 특징을 포함하는 분석 연구의 준비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복합

그림 4. 총공공사회지출에서 순사회지출함으로, 2003년

